

# VIP REPORT



## ■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 3년간(05~08년) 중산층 7.6%p가 사라졌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 3년간(05~08년) 중산층 7.6%p가 사라졌다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 분석 .....	4
3. 중산층 감소와 저소득층 증가의 원인 .....	6
4. 중산층 붕괴의 문제점 .....	10
5. 정책적 시사점 .....	11
【참고 문헌】 .....	12
■ HRI 경제 지표 .....	14

## 1. 개요

### (1) 분석 배경

최근 한국 사회는 잦은 경제적 충격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해체, 생계형 범죄 상승, 계층간 갈등 심화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단편적인 사회 이슈가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계층의 비중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중산층의 비중 변화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어떤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나아가 중산층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 대응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 (2) 분석 방법

**(분석 이용 자료)** 본 분석은 통계청의 KMDSS(Korea Micro 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중 2005년(87,705가구) 및 2008년(84,908가구)의 가구 표본을 이용하였다. **(중산층의 정의)** Atkinson 등(1995) 이후 국내외 상당수 연구결과들에서와 같이 본 분석에서도 중산층(middle class)은 표본 중 중위수(median) 소득 가구의 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50~150%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의한다. **(중저소득계층의 정의)** 중저소득계층이란 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저소득층으로의 이동이 우려되는 계층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분석에서는 50~100%의 소득 계층을 중저소득계층으로 보았다.

## 2.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 분석

**(‘산(山)’형 소득분포에서 ‘고원(高原)’형으로 전환)** 소득 구간을 중위수 가구 소득 대비 10%p 단위로 상대도수분포도를 작성해 보면, 불과 3년 만에 중산층 비중이 높은 ‘산형’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이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고원형’ 분포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5년 및 2008년 소득구간별 상대도수분포도 >



- 주: 1) 통계청 KMDSS 가계동향조사 2005년(87,705가구) 및 2008년(84,908가구) 통계를 분석  
 2) 위 그림의 세로축은 중위수 가구 소득액 기준 10%p 단위의 구간별 상대도수를 의미  
 3) 중위수(median) 가구는 소득 크기의 순서로 가구들을 나열할 때 정중앙 가구를 의미.

**(중산층 7.6%p 감소)** 소득 계층을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의 3계층으로 구분하였을 때, 총 표본가구수 대비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은 2005년 57.5%에서 2008년 49.9%로 7.6%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4.9%p 증가)** 이는 고소득계층에서의 하향이동과 저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중산층 비중 감소분 7.6%p중에서 2.7%p의 가구만이 고소득계층으로 상향이동한 반면 저소득 계층으로의 이동은 4.9%p에 달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총표본 가구수 대비 저소득계층 가구수 비중은 2005년 18.1%에서 2008년 23.0%로 4.9%p가 증가하였다.

**(중저소득층 1.8%p 감소)** 중산층 가구 중에서 소득 구간 50~75%에 위치한 가구들인 중저소득계층의 가구수 비중은 2005년 14.8%에서 2008년 13.0%로 1.8%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이 단기간 내 급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 2005년 및 2008년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 >

소득계층	구간(중위수 소득 기준)	2005	2008	차이
고소득층	150% 초과	24.4%	27.1%	+2.7%p
중산층	50%~150%	57.5%	49.9%	△7.6%p
(중저소득층)	50%~75%	(14.8%)	(13.0%)	(△1.8%p)
저소득층	50% 미만	18.1%	23.0%	+4.9%p

주 : 1) 통계청 KMDSS 가계동향조사 2005년(87,705가구) 및 2008년(84,908가구) 통계를 분석  
 2) 구간은 기준 가구(중위수 가구)의 소득금액 대비 개별 가구 소득의 비중을 의미  
 3) 중위수(median) 가구는 소득 크기의 순서로 가구들을 나열할 때 정중앙 가구를 의미.

### 3. 중산층 감소와 저소득층 증가의 원인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력 저하)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절대적 일자리 부족을 들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1990~97년) 2.3%에서 외환위기 이후(2000~08년) 1.7%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감률은 연평균 -0.6%로 전체 고용 창출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의 경우 단기간 내 현금화 가능

자산이 많지가 않아 절대적인 소득 원천은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직은 즉각적으로 중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계 건전성 하락) 단기간 내 외환위기와 소비버블 붕괴의 두 가지 경제 충격으로 가계 건전성이 악화될 점을 들 수 있다.** 가계신용이 개인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3.3%에서 2002년 100%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120.1%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계의 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 하에서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 유입이 단절 될 경우 가계 파산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청자수는 2002년 505명에서 소비버블 붕괴가 본격화된 2004년 28만 7,352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신청자수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오다가 2008년에는 7만 9,144명으로 전년대비 24.2%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30~49세 사이의 주력 경제활동 연령층의 신청 비율이 70.6%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층 상향 이동의 단절) 계층간 상향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도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특유의 학력 중시 사회 시스템 하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계층간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 공교육 실패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계층간 교육투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난의 대물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통계국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에서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수 비중은 39.7%에 달한 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계층에서는 0.5%에 그치고 있다.

#### 4. 중산층 붕괴의 문제점

**(전망)** 중산층 감소와 저소득층 증가가 외환위기와 소비버블붕괴와 같은 대규모 경제적 충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중산층 붕괴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문제점)** 경제 내 중산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게 되면 **첫째, 내수 기반이 취약해져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된다.**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의 비중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가계 소비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 기반이 약화되어 경제의 대외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사회 불안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어 정책의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 조정 비용의 급증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와 조세 감면에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층에서의 조세 추가 징수나 재정 악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 5. 정책적 시사점

넓어져가는 중산층 비중을 확대하여 경제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확충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 전략이 성공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의 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적인 복지 정책 운용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공무원의 복지 예산의 횡령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복지 전반의 철저한 집행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보다 확대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계층 상향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교육과정 변경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 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 평가제 도입을 통해 우수 교원에 대한 승진과 임금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의 내실화,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현실성을 반영한 소득세제 개편으로 실효적인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세 행정의 현실상 고소득 계층의 세원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조세 포착 기법을 개발하고 일선 조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나마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로소득세제 시스템이 중저소득층의 세원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 표준 제도가 경제 상황과 소득계층 구조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개요

### (1) 분석 배경과 목표

#### ○ 최근 중산층 비중 변화의 추산과 정책 대응 도출

- 최근 한국 사회는 잦은 경제적 충격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해체, 생계형 범죄 상승, 계층간 갈등 심화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이러한 단편적인 사회 이슈가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계층의 비중 변화를 분석함

### (2) 분석 방법

#### ○ 분석 이용 자료

- 본 분석은 통계청의 KMDSS(Korea Micro 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중 2005년(87,705가구) 및 2008년(84,908가구)의 가구 표본을 이용<sup>1)</sup>

#### < 소득 변수의 통계적 특성 >

	2005	2008
평균 (mean)	2,935,686	3,026,681
중위수 (median)	2,533,300	2,561,340
최대 (maximum value)	132,000,000	168,000,000
최소 (minimum value)	0	0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2,472,502	2,748,006
왜도 (Skewness)	11	10
첨도 (Kurtosis)	368	381
표본수 (number of observations)	87,705	84,908

1)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단위로 조사되며 일반적으로 매회조사에서 샘플의 10%가 교체됨, 본 분석에 이용되는 연간 자료들은 이러한 월 단위 샘플의 연 단위 집합으로 Pool 데이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중산층의 정의

- 사전적 의미 : 중산층(中産層)이란 말 그대로 재산(財産) 소유 정도가 중간인 계층을 의미하나, 재산의 범위, 중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정치경제학적 의미 : 유산 계급(有産 階級)과 무산 계급(無産 階級)의 가운데에 위치한 소자산 계급(小資産 階級)을 의미함
- 사회학적 의미 : 소득 수준, 이념 성향, 정치 철학, 교육 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사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함
- 경제학적 의미 :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지역 등 부차적인 중산층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외 문헌들의 경우 상당수가 표본내 소득수준의 중위수 (median income) 를 중심으로 일정 비율 안에 해당되는 근로자나 가구를 중산층 (middle class)이라고 해석함
  - 美 센서스국은 중위 소득의 50~20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Thurow (1984)는 중위 소득의 75~125%, Lawrence (1984)는 남자 중위 소득의 2/3~4/3 수준을 중산층으로 정의함
  - 그러나 대체적으로 Atkinson 등(1995) 이후 국내외 상당수 연구결과들에서 중산층은 중위수 (median) 소득의 50~150% 범위 내에 있는 가구나 근로자를 의미함<sup>2)</sup>
  - 소득의 50~150% 범위 내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류상영·강석훈(1999), 유경준(2005, 2008)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도 중산층(middle class)은 표본 중 중위수(median) 소득 가구의 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50~150%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의함

---

2) Atkinson, Rainwater, Smeeding (1995), *Social Policy Studies :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참조.

< 중산층의 다양한 정의 >3)

구 분		중산층의 정의
해 외 연 구	Atkinson et al (1995)	- 중위 소득의 50~150%
	美 센서스국	- 중위 소득의 50~200%
	Thurow (1984)	- 중위 소득의 75~125%
	Lawrence (1984)	- 남자 중위 소득의 2/3~4/3
	Levy (1988)	- 5분위 가구 소득 중 2분위~4분위
국 내 연 구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8)	-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 - 아파트 30평 전세 이상 - 자가용 소유 - 고학력 - 일정 시간 이상의 문화·레저 생활 향유
	류상영·강석훈(1999)	- 중위 소득의 50~150%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2005)	- 정치: 진보 - 사회: 안정 - 연령: 30대 - 고학력, 고소득
	홍두승 (2005)	- 소득 수준 :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상 - 계급적 지위 : 중상 계급 - 교육수준 : 2년제 대학 이상 - 주택 : 자가 20평 이상, 전·월세 30평 이상
	유경준 (2005, 2008)	- 중위 소득의 50~150%

○ 중저소득계층의 정의

- 본 분석에서는 50~100%의 소득 계층을 중저소득계층으로 간주함
- 중저소득계층이란 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저소득계층으로의 이동이 우려되는 계층을 의미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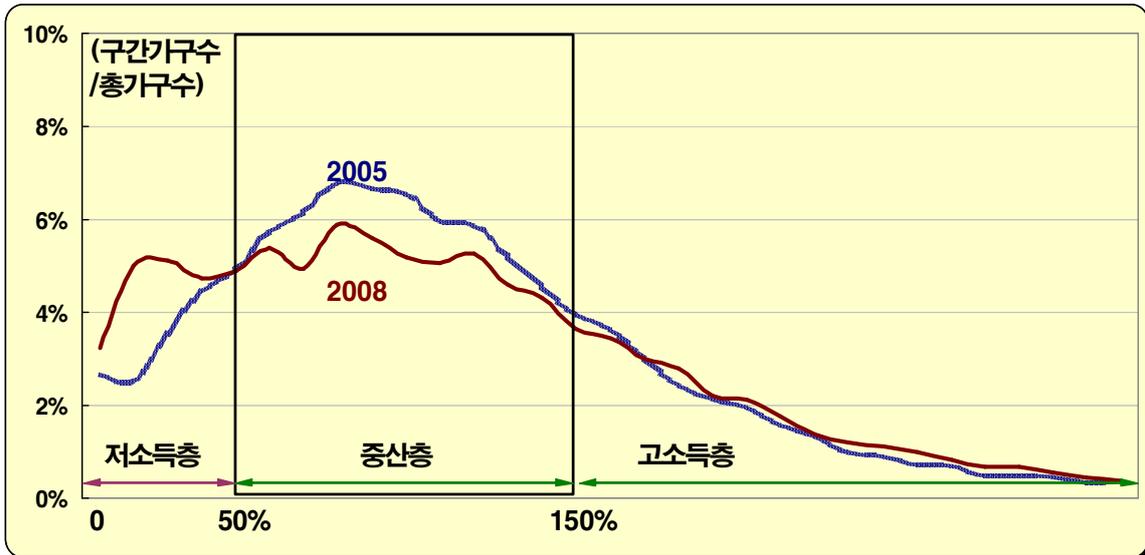
3) 자세한 문헌 개요는 【참고 문헌】 을 참조.

## 2.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 분석

### ○ 소득분포 '산(山)'형에서 '고원(高原)'형으로 전환

- 소득 구간을 중위수 가구 소득 대비 10%p 단위로 상대도수분포도를 작성해 보았을 때, 불과 3년 만에 중산층이 비중이 높은 '산'형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이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는 '고원'형 분포로 바뀌고 있음

< 2005년 및 2008년 소득구간별 상대도수분포도 >



- 주: 1) 통계청 KMDSS 가계동향조사 2005년(87,705가구) 및 2008년(84,908가구) 통계를 분석  
 2) 위 그림의 세로축은 중위수 가구 소득액 기준 10%p 단위의 구간별 상대도수를 의미  
 3) 중위수(median) 가구는 소득 크기의 순서로 가구들을 나열할 때 정중앙 가구를 의미.

### ○ 중산층 7.6%p 감소

- 소득 계층을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의 3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총 표본가구수 대비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은 2005년 57.5%에서 2008년 표본 가구의 49.9%로 7.6%p가 감소

○ 저소득층 4.9%p 증가

- 중산층 비중 감소분 7.6%p중에서 2.7%p의 가구만이 고소득계층으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저소득 계층으로의 이동은 4.9%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총표본가구수 대비 저소득계층 가구수 비중은 2005년 18.1%에서 2008년 23.0%로 4.9%p 증가함

○ 중저소득계층 1.8%p 감소

- 중산층 가구 중에서 소득 구간 50~75%에 위치한 가구들인 중저소득계층의 가구수 비중은 2005년 14.8%에서 2008년 13.0%로 1.8%p가 하락함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이 단기간 내 급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한 것으로 추측됨

< 2005년 및 2008년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 >

소득계층	구간(중위수 소득 기준)	2005	2008	차이
고소득층	150% 초과	24.4%	27.1%	+2.7%p
중산층	50% ~ 150%	57.5%	49.9%	△7.6%p
(중저소득층)	50% ~ 75%	(14.8%)	(13.0%)	(△1.8%p)
저소득층	50% 미만	18.1%	23.0%	+4.9%p

주 : 1) 통계청 KMDSS 가계동향조사 2005년(87,705가구) 및 2008년(84,908가구) 통계를 분석  
 2) 구간은 기준 가구(중위수 가구)의 소득금액 대비 개별 가구 소득의 비중을 의미  
 3) 중위수(median) 가구는 소득 크기의 순서로 가구들을 나열할 때 정중앙 가구를 의미.

### 3. 중산층 감소와 저소득층 증가의 원인

#### ○ 고용 창출력 저하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절대적 일자리 부족이 중산층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의 경우 단기간 내 현금화 가능 자산이 많지가 않아 절대적인 소득 원천은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실직은 즉각적으로 중산층으로부터의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실업률 상승 : 외환위기 이전 실업률은 2.4%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3.4%로 평균 1%p가 증가
- 청년 실업 문제 심화 :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 5.5%에서 외환위기 이후 7.3%로 1.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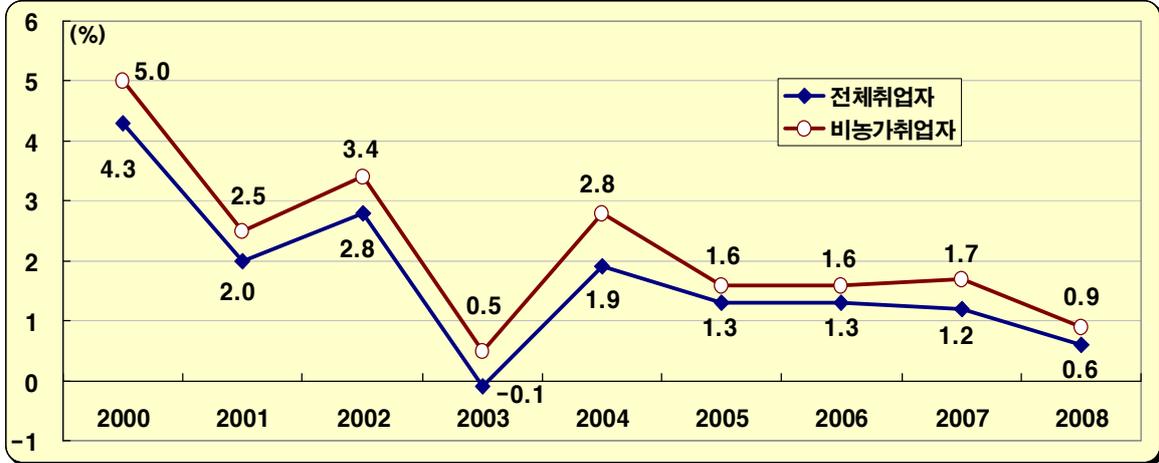
#### < 외환위기 전후 고용 시장 지표 변화 >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기간중	외환위기 이후
	1990~1997	1998~1999	2000~2008
실업률 (%)	2.4	6.7	3.4
청년실업률 (15~29세, %)	5.5	11.6	7.3
취업자수 증가율 (%)	2.3	-2.1	1.7

자료: 통계청.

-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 :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도 외환위기 이전 2.3%에서 외환위기 이후 1.7%로 하락
  -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경기 동반 불황의 경제 충격으로 취업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취업자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경제 주력 부문인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1~2008년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감률은 연평균 -0.6%인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감률은 2.6%를 기록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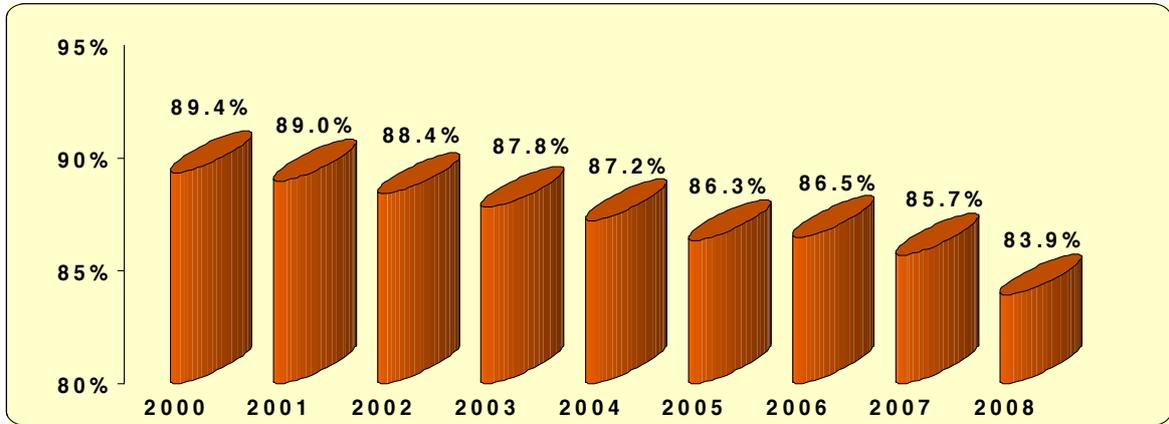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률	-0.6%	-0.6%	-0.8%	2.0%	-1.3%	-1.6%	-1.2%	-1.0%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률	4.2%	4.1%	0.2%	3.3%	2.5%	2.5%	2.4%	1.6%

자료: 통계청.

- 한편 경제의 관찮은 일자리도 많이 축소되어 가계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9.4%에서 2008년 83.9%로 축소됨

3년간(05~08년) 중산층 7.6%p가 사라졌다

< 주당 36시간 취업자수/ 전체취업자수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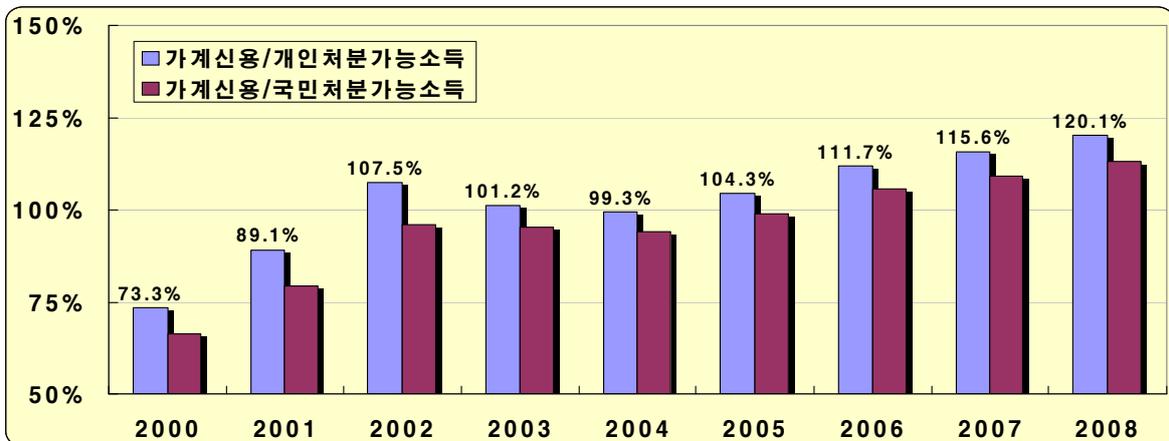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가계 건전성 하락

- 단기간 내 외환위기와 소비버블 붕괴의 두 가지 경제 충격으로 가계 건전성이 약화됨
- 가계신용이 개인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3.3%에서 2002년 100%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120.1%에 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가계의 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 하에서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 유입이 단절될 경우 가계 파산의 위험이 높아지게 됨

< 주당 36시간 취업자수/ 전체취업자수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청자수는 2002년 505명에서 소비버블 붕괴가 본격화된 2004년 28만 7,352명으로 급증한 바 있음
  - 이후 신청자수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오다가 2008년에는 7만 9,144명으로 전년대비 24.2%가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2008년 30~49세의 주력 경제활동 연령층의 신청 비율이 70.6%에 이름

< 신용회복 신청자수 추이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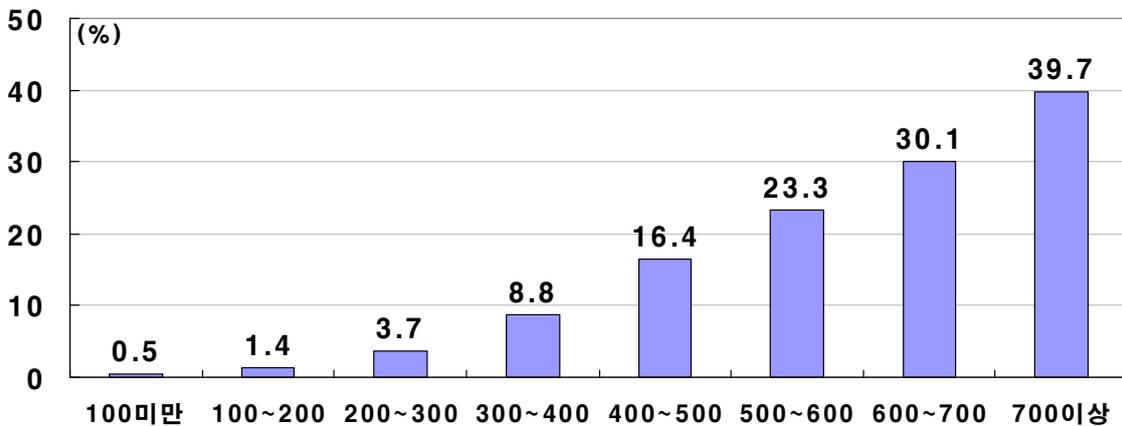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05	62,550	287,352	193,698	85,826	63,706	79,144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계층 상향 이동의 단절

- 계층간 상향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도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로 판단됨
  -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특유의 학력 중시 사회 시스템 하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계층간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
  -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 공교육 실패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계층간 교육투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난의 대물림 구조'가 지속됨
  - 참고로 2008년 기준 월소득 700만원이상 계층에서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수 비중은 39.7%, 월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은 0.5%에 불과

< 소득 계층별 월 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가구 비중(2008년)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사교육비조사.

주: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의 학부모 약 34,000명 대상.

#### 4. 중산층 붕괴의 문제점

##### ○ 전망

- 중산층 감소와 저소득층 증가가 외환위기와 소비버블붕괴와 같은 대규모 경제적 충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최근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중산층 붕괴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 ○ 문제점

- 경제 내 중산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게 되면 내수 기반이 취약해져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2008년 기준으로 가계 소비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 기반이 약화되어 경제의 대외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중산층 붕괴로 사회 불안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어 정책의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 저소득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 조정 비용 급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중산층 붕괴 이후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와 조세 감면에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층에서의 조세 추가 징수나 재정 악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함

## 5. 정책적 시사점

### ○ 일자리 확충을 통한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방지

- 근본적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함
-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 전략이 성공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의 산업 인력 양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효율적인 복지 정책 운용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

- 저소득 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함
- 따라서 최근 일부 공무원의 복지 예산의 횡령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복지 전반의 철저한 집행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보다 확대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함

### ○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계층 상향 이동의 가능성 증대

-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임

### 3년간(05~08년) 중산층 7.6%p가 사라졌다

---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교육과정 변경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원 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 평가제 도입을 통해 우수 교원에 대한 승진과 임금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의 내실화,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함

#### ○ 현실성을 반영한 소득세제 개편으로 실효적인 소득 재분배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조세 포착 기법을 개발하고 일선 조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고소득 계층의 세원 파악 능력을 확충
- 또한 근로소득세제 시스템이 중저소득층의 세원 부담 증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 제도가 경제 상황과 소득계층 구조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박태일 (1998), “IMF 시대의 중산층 생활과 의식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舊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유상영·강석훈 (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유경준 (2002),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 및 원인분석 : 소득이동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유경준·최바울 (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 상반기).

홍두승 (2005), “중산층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의 중산층」”, 서평문화 제58집 (2005 여름).

#### 해외 문헌

Atkinson, Rainwater, Smeeding (1995), Social Policy Studies :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Lawrence (1984) Lawrence, R.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Brookings Review.

Levy (1988) Levy, F. Dollars and Dreams: The Changing American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Norton.

Thurow (1984) Thurow, L.C. "The Disappearance of the Middle Class." New York Times February 5, 1984.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mailto:juwon@hri.co.kr), 02-3669-4030)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	2008(E)				2009 수정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4.7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4.5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7.6	1.0	4.7	-14.0	-2.0	-11.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68	-79	15	-133	66
		수출 (억 \$)	3,715	2,140	1,152	931	4,220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3,568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2.8	
	실업률 (%)	3.2	3.2				4.0	
	국제유가(Dubai, \$)	68	94.29				55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36				1,250	